

7.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시민안전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5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 개정이유

- 하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안 제4조에 전년대비 과도하게 점용료가 증액되지 않도록

제한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와 점용허가 변경의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용료 납부기간을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의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요율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제12조의 허가 수수료의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1·2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개정조례안은

- ▶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점용료 조정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 및 감면에 따른 반환 규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전년도 대비 5퍼센트만 증가하도록 제한하고, 단서조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하였음.

5퍼센트 제한 규정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점용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하천법」(이하 “법”) 제37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및 그 밖의 하천사용료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점용료 등”은 하천수 사용허가도 포함¹⁰⁾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5퍼센트 제한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납부기한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유예 또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음.

천재지변 등에 따른 납부기한의 조정은 「지방세기본법¹¹⁾」에서도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¹²⁾

1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 등”라 한다)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감염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부터 분리하여 제정(2016. 12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행령 개정사항(2016. 6월)을 반영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후단¹³⁾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 **안 제7조**에서는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가 취소 등의 사유 외에도 점용료 등을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있다면 반환토록 규정하여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 **안 제11조**에서는 징수교부금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6. 7. 12.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군수가 징수하여 대구시에 납입한 변상금의 경우 기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구·군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하는 것으로 법에서 허가수수료가 폐지된 사항(2016. 1. 1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였음.
- ▶ **안 별표1**에서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과 하천수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음.

13)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 안 별표2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써 규정토록 위임¹⁴⁾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을 80%로 규정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 다만, 본 조례의 최근 개정일자가 2013. 11. 11.로서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이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 및 법령합치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실제 이제까지 점용료 등이 5% 이상 인상된 적이 있는지? 굳이 조례에 5%로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최근에는 없음. 근거규정이 상위법에 있으므로 조례에도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올해 코로나19 점용료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감면 금액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 기한도 연장하고 감면도 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추정컨대 1억 5천만원 정도로 전년대비 점용료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